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국문요약

최근 한국사회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치지향에 따라 좌우로 갈라지고,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남남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헌신하는 주체적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한때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되돌아보게 된다.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선호했던 일반 국민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화가 통일 환경을 촉진하고 진전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민주화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한국 정부는 비로소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인 선언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도출할 수도 있었다.

실증분석 자료로는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화 선호변수'를 추출하였으며,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조사대상을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중간정도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약하게 선호하는

* 이 글의 초안은 2009년 11월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일상생활 속의 통일』에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당시 토론해주신 송실대 강원택 교수님과 익명의 두 분 평가자에게 감사드린다.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해주셨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집단'으로 3분하였다.

이어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식에 있어서,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민주화 선호가 중간정도이거나 약한 집단에 비해 통일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큰 집단이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 지지 세력이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민주화선호가 강한 집단과 여타 집단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지향에 따른 좌-우와 달리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 간에는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정부 통일정책이 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부를 비난하게 된다. 이에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되려면, 정부가 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통일정책, 민주화 선호경향, 통일의식, 강한 민주화 선호집단

I. 머리말

냉전시대에는 정부가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치권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졌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높았지만 구호만 난무했을 뿐,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회단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역시 실질적이기 보다 명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예컨대 1979년 3월 재야에서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공동의장 윤보선·함석헌·김대중)'은 단체명에서 민족통일을 표방하였지만 실제 활동은 민주주의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정세 변화로서의 민주화가 통일논의에 새 지평을 열어놓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는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하고 통일논의를 개방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 인적교류를 위한 문호개방을 제안하고, 1989년 9월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주장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¹⁾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민주화 보다는 탈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새로운 통일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를 이룩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은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일부 수정해서 1994년에 공포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한반도를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크게 변하였다. 이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전제를 견지하면서도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하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연성복합통일론’이 대표적인 연구이다.²⁾

하지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방안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회세력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통일방안이 실현될 수

1) 임동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확립”, 최장집 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파주: 웅진싱크빅, 2007), p. 288.

2)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5년 5월 19일).

있을 것이다. 통일 추진 사회세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0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통일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방안’ 협동연구사업이다. 이 연구는 이후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다 구체화된다.³⁾ 연구자들은 통일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시민단체(NGO) 외에 일반시민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특히 일반시민의 통일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고자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확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통일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통일 NGO가 크게 활성화되어 보수단체와 반목하면서 나타난 갈등”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⁴⁾ 나아가 통일 NGO의 대표성, 실적주의, 상업화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통일 NGO들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의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이지만 통렬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⁵⁾

현재 한국 시민사회는 정치 성향별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고, 이들 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달리하면서 심

3)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성훈 외,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4) 김국신,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 57.

5) 위의 책, p. 60.

한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치지향 집단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국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기 힘들 것이다.⁶⁾

둘째,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발전할수록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중요해졌다. 국민 개개인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점점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국민들 역시 통일정책에 일반국민의 영향력이 크다고 자임하고 있다. 2005년의 전국 규모 조사에서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어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24.7%였다.⁷⁾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 일반국민의 통일정책에 대한 무관심 증대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1994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1.6%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하였다.⁸⁾ 그러나 2009년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6%, ‘반반/그저 그렇다’가 23.6%, ‘필요하지 않다’가 20.6%이다.⁹⁾ 질문 양식이 다르기

6) 그렇다고 남남갈등을 회피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로드맵일수록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할 것이고, 정부가 남남갈등을 두려워해서 해당 정책을 회피하면 결국에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변적인 정책만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박종철,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 106의 <표>. 제시된 6개의 선택지별 응답 순서는 일반시민(24.7%), 정치인(21.8%), 언론(19.7%), 대통령과 청와대(14.8%), 정부부처(10.8%), 시민단체(8.2%) 순이었다.

8)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때문에 두 조사를 역면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일의식이 약화된 것만은 틀림없다.¹⁰⁾

일반국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시점임에도, 실제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늘어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층이 늘어날수록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무관심 할수록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우선시하고 통일정책은 뒷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 무관심층이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증가는 불가역적인 현상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민주화’ 역시 비현실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가치가 확산되고 마침내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통일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일반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통일정책을 근간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상과 같은 통일지향 사회집단을 찾을 것인가? 통일지향 집단이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적

9)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참고로 2007년도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하면, 각각 63.8%, 51.6%였다.

10) 정확하게는 ‘통일지향의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통일의식’이라고 칭하였다. 전태국은 통일의식을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상, 관념, 감정, 의지, 열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전태국, “변화하는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통일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한독사회학회 ·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2009년).

넘 지평을 넘어선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이에 이글은 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의 역량이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¹¹⁾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집단의 통일의식은 어떠한가, 이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했을 때 향후 통일정책은 어떠한가?’라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이어서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사회집단의 존재를 탐색해야한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로 일반국민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3분하고, 이들 집단이 명목상의 집단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재적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타집단과 비교한 다음, 이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의 논의가 통일 내지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II. 통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

남북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지향으로 민주주의, 민족(주

11)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켜보자는 문제의식은 2007년 통일의식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특히 박명규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민주화 선호’ 변수를 조작화하는 데 사용한 변수가 약간 다르지만, 해당 년도 통일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2007년) ; 박명규 외 공저, 『2008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의), 평화, 인권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 중 그동안 많이 분석된 것이 ‘민족주의’와 통일과의 관련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해 좌파와 우파가 ‘민족주의’ 우산 하에 결합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분단이후에도 민족주의는 남북 대화나 통일 논의의 핵심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민족/민족주의는 ‘국민대 민족’, ‘민족 대 탈민족’, ‘국가 대 탈국가’라는 다중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다.¹³⁾ 물론 여전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남북통일을 합의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지만,¹⁴⁾ 민족주의만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데는 분명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평화’와 통일, ‘인권’과 통일을 연계시키는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편가치로서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예상외로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킨 논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박명림은 한국 현대사 분석을 통해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지 않는 한 통일이 바람직한 내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남북한의 민주주의 발전 없이 평화·통일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¹⁵⁾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민족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운동의 공”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¹⁶⁾

12) 하영선, 전재성, 김수암은 각각 ‘평화’, ‘민족’, ‘인권’을 남북관계 및 통일연구와 관련해서 개념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영선 외 공저,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평화, 민족, 인권 개념 분석”, 통일평화연구소 엮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2009년 2월 5일).

13) 박명규,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제41집 (2008), pp. 245~262.

14) 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15) 박명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서울: 세종연구소, 1999).

민주주의 없는 남북한 ‘민족주의’가 남북 간에 화해보다는 대립을 야기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 통일논의가 진정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⁷⁾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토양이 굳건하게 존재해야 비로소 통일논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평화나 인권 같은 보편가치는 ‘민주주의’ 가치 지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특정 사회운동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회집단에 의해 사회운동이 촉발되었을지언정, ‘민주화’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이 소수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일부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¹⁸⁾ 특정 집단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 민주화 이전 단계의 분석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세력’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배후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도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당위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처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집단을 식별하기 힘들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를

16) 최형익,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2호 (2006), p.63.

17) 평화, 민족,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커다란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매우 느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18) 고성국, “민주화운동세력과 제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책』, 25 (198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활용해서 민주주의 지향집단을 색출하려고 한다.¹⁹⁾

〈표 1〉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 제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평균값을 3년 동안 제시한 것이다.²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가 지난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평균값이 대부분 소수점 2째 자리에서 0.01~0.05 차이가 나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10월 유신'의 경우에도 평균에서 0.09의 차이가 날 뿐이다. 표준편차는 더욱 유사해서 가장 큰 차이가 '5·16'의 경우인 데 0.03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달라도 평균값이나 표준편차가 유사할 수 있다. 이에 응답분포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연도별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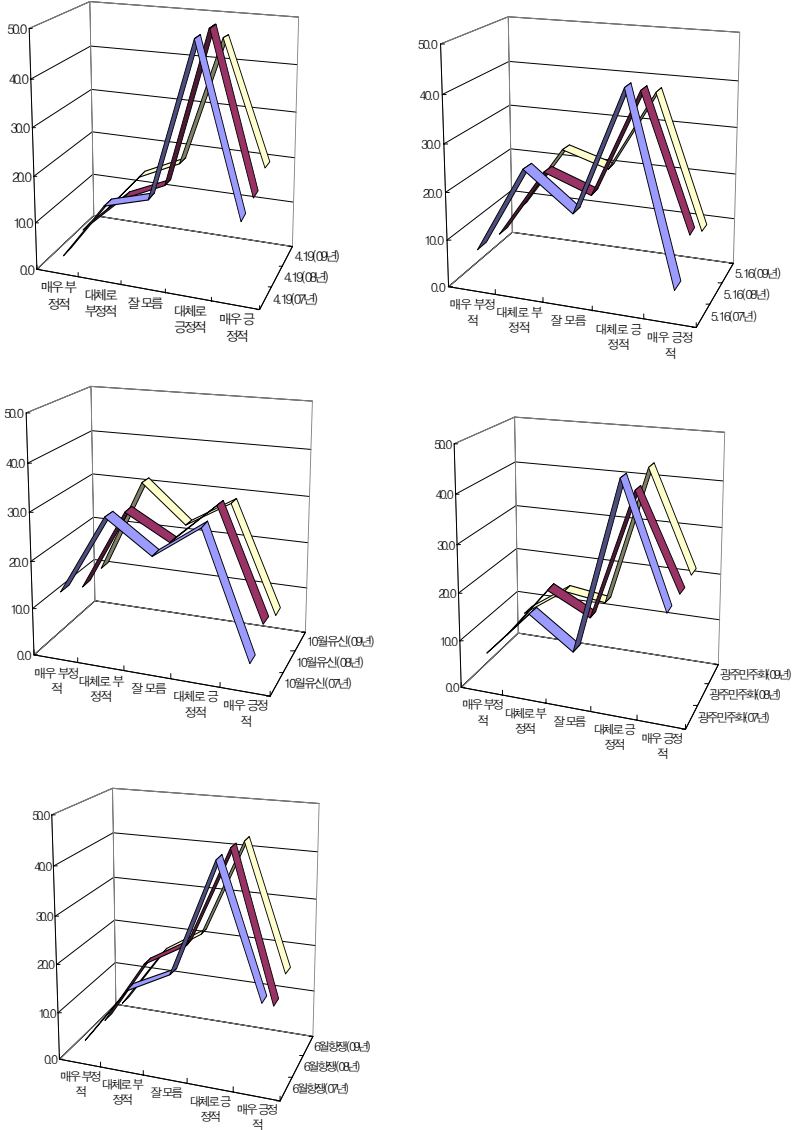
〈표 1〉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사건	2007년 (1,200명)	2008년 (1,213명)	2009년 (1,203명)
4·19	.31(.50)	.32(.51)	.32(.52)
5·16	.07(.55)	.15(.57)	.08(.58)
10월 유신	-.09(.56)	-.00(.58)	-.06(.56)
광주민주화 운동	.28(.59)	.25(.60)	.28(.60)
6월 항쟁	.28(.53)	.22(.52)	.25(.53)

점수부여 :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잘 모름=0.0',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19) 그 사건은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5가지 사건이다.

20) 각 사건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이라는 5응답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그림 1]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응답분포(2007~2009)

각 사건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면 (<표 1> 참조), 4·19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에는 다소 처진 상태로 5·16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0월 유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 평가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등하게 존재하되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가 어떤 가치지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5가지 사건 중 4·19,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견이 적을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가졌다고 바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민주-반민주 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무질서,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평가했는지는 5·16이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명확하지 않다. 5·16이나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와 연계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을 기초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이 아니라 근대화, 경제성장, 사회질서 등과 연계시켜 평가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주-반민주' 축만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반민주' 축 외에 '질서-무질서'나 '성장-분배' 등 다양한 축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사건을 평가한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요인분석을 통해 그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만일 주성분 분석에서 하나의 요인만 추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 변수(민주-반민주 축)일 것이다.²¹⁾ 하지만 실제 주성분 분석 결과는 3개년 모두에서 2개의 요인(Eigen Value 1 이상)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2가지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카이저(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을 구하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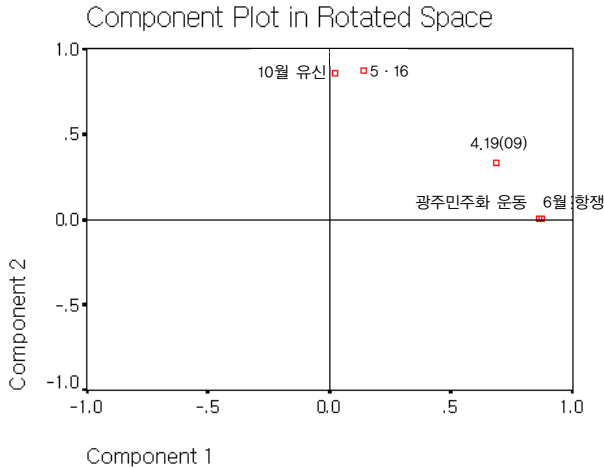
〈표 2〉 성분행렬

	2007년				2008년				2009년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1	2	1	2	1	2	1	2	1	2	1	2
4·19	.761	-.069	.705	.295	.738	.033	.526	.518	.754	-.070	.682	.329
5·16	.563	.646	.196	.834	.672	.568	.120	.872	.569	.672	.142	.869
10월 유신	.387	.749	-.008	.843	.295	.601	-.008	.802	.458	.720	.022	.853
광주민주화	.778	-.363	.857	.043	.834	-.558	.860	.024	.743	-.438	.863	.007
6월 항쟁	.764	-.417	.871	-.011	.843	-.518	.863	.080	.749	-.447	.872	.003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21) 요인분석을 하기보다 '각 사건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해서 변수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5개 사건에 대한 응답이 단일 차원을 측정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한다. 그러나 질문들이 단일차원을 측정했다면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변수(요인)가 하나이어야 하지만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에 요인분석을 활용한 것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 척도'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척도'가 포함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림 2] 2009년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그리고 [그림 2]는 2009년도의 경우에 한정해서 성분도표를 제시한 것이다.²²⁾ ‘성분1’이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및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분2’가 ‘10월 유신’ 및 ‘5·16’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분1’은 통상 민주화 운동에 포함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 명을, ‘성분2’는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사건으로 보아 ‘안정 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²³⁾

²²⁾ 2009년도 경우만 제시한 것은 2007년, 2008년도 성분도표도 극히 유사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²³⁾ 한편 여러 분이 ‘안정 선호’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었다. 하지만 안정 선호 변수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안정 선호 변수는 민주화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변수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안정 선호 변수와 민주화 선호변수는 한 변수의 양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변수라는 점이다.

이 글이 민주주의 지향가치가 통일외의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민주화 선호 변수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7~2009년 3년간 민주화 선호변수는 <표 3>과 같은 기술 통계 특성을 갖고 있다.

<표 3> 민주화 선호 변수와 집단구분 (2007~2009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화 선호 '강' (0.5이상)	민주화 선호 '중' (-0.5~05)	민주화 선호 '약' (-0.5이하)	계(명)
민주화 선호 (2007)	0.0 1.0	-2.72 1.82	32.3 (388)	37.1 (445)	30.6 (367)	100.0 (1,200)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69 2.10	33.0 (400)	32.0 (388)	35.0 (425)	100.0 (1,213)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87 1.83	32.9 (396)	35.6 (428)	31.5 (379)	100.0 (1,203)

민주화 선호 변수 값이 0.5이상인 국민을 '강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0.5이상 집단을 '중간정도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집단을 '약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약)'으로 구분했을 경우,²⁴⁾ 지난 3년 동안 민주화 선호에 따른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민주화 선호 집단구분이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이 외적으로

²⁴⁾ 집단을 구분하는 데 정해진 절대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민주화 선호 변수 값 ± 0.5 를 기준으로 3분하였다. 보다 엄격하게 ± 1.0 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1.0 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경우 연도별 집단 구성이 15% 내외, 70% 내외, 15% 내외였다. 여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수가 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주화를 선호하는 층을 판별해낸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한편, 민주화 선호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을 25%, 50%, 25%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받기도 하였지만, 이 글이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의 존재 자체부터 알아보는 시도였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 점수 자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명확하기 드러난 집단구분이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 경향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집단 구분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 선호경향은 ‘관용성(toleran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4>).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90% 정도가 ‘시위나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반드시’+‘대체로’)’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화 선호도가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75% 이상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민주화 선호 변수와 관용성(2009년) (단위 :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chi^2=153.95, p<0.001$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42.3	20.8	12.1
	대체로 허용해야 한다	49.9	58.4	52.2
	가급적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7.3	18.5	28.5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0.5	2.3	7.1
'촛불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 $\chi^2=174.46, p<0.001$	매우 찬성	38.6	16.8	9.8
	다소 찬성	37.6	32.2	30.3
	반반/ 그저 그렇다	15.7	34.1	28.0
	다소 반대	5.8	11.2	19.3
	매우 반대	2.3	5.6	12.7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chi^2=24.94, p<0.00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5.6	1.4	2.4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8.2	32.1	29.8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9.2	59.5	57.5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9	7.0	10.3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인식 $\chi^2=31.31, p<0.00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한다	55.6	40.9	43.5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9.9	45.8	43.5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4.5	13.3	12.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성도 마찬가지이다. 탈북자를 예로 들었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탈북자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결국 민주화 선호변수로 구분된 집단이 실제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민주화 선호 경향이 정치지향 변수분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상 보수 보다 진보가 관용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집단 간에 나타난 관용성의 차이가 실은 정치성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표 5〉를 보면 ‘진보’는 40% 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고, 반대로 보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40% 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에 속한다. 더구나 연도별로 진보성향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보수의 경우, 민주화 선호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민주화 선호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고, 약간씩이지만 관련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민주화 선호경향과 정치성향 (단위 : %)

정치성향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명)	
진보	2007	42,2	34,3	23,4	100,0(303)
	2008	46,7	29,4	23,9	100,0(289)
	2009	48,5	27,4	24,1	100,0(299)
중도	2007	26,6	38,9	34,5	100,0(568)
	2008	28,3	36,0	35,7	100,0(583)
	2009	29,9	41,1	28,9	100,0(581)
보수	2007	33,3	36,7	30,0	100,0(327)
	2008	29,3	27,3	43,4	100,0(341)
	2990	23,8	33,1	43,0	100,0(323)

²⁵⁾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진보는 보수에 비해 관용성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와 정치성향 간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비율이 높지만, 진보성향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향이 약한 사람이 20%가 넘는다. 반대로 중도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최소 20%는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통상 '진보 정치성향'과 '민주주의 선호경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²⁶⁾ 실제로는 수적으로 중도나 보수가 진보 보다 많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중도와 보수가 차지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과 진보 성향 집단이 서로 중첩되지만, 두 집단 구성원의 일치성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지만, 민주화 선호성향 차이는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년 계속 물어보았고, 2009년에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표 6〉).

분석결과 모든 조사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주화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별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²⁶⁾ 한국사회 민주화에 진보 정치성향 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도나 보수 정치성향 집단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표 6〉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단위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 (명)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7) $\chi^2=11,64$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5,0	17,8	17,2	19,9 (23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0,9	33,3	29,5	31,4 (376)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1	49,0	53,3	48,7 (584)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8) $\chi^2=10,35$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1,3	18,8	19,8	20,0 (24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0	22,9	19,8	23,5 (28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0,8	58,2	60,5	56,6 (686)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9) $\chi^2=9,53$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3,0	17,1	17,9	19,3 (23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2,8	32,2	28,2	31,2 (37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2	50,7	53,8	49,5 (596)
통일과 북한민주주의 (2009) $\chi^2=18,51$ $p<0,00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34,8	27,6	23,5	28,7 (345)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5	28,7	25,9	27,8 (334)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6,6	43,7	50,7	43,6 (524)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선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27) 이론적 논의와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민주주의와 통일이 관계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질문자체가 일반국민에게 매우 생소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조사결과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킨 논의가 희소한 현실과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지에 관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으려면 앞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하는 담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진다'는 응답 비율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에는 '남한 민주주의 →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가 '통일 → 남한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남한 내 민주주의 공고화 노력이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케 하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 → 북한 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가 '북한 민주주의 →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는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없다는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통일의 선호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남한 민주주의 → 통일 → 북한 민주주의'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민주화 선호경향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경향별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²⁸⁾ <표 7>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가능시기,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χ^2 검증 결과 참조).

²⁸⁾ 2007년, 2008년 자료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표 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chi^2=70.63$ $p<0.001$	매우 필요하다	38.1	19.2	16.9
	약간 필요하다	30.8	31.1	31.7
	반반/그저 그렇다	18.7	26.6	25.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4	18.0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5.1	6.1
통일가능시기 $\chi^2=44.92$ $p<0.001$	5년 이내	2.3	2.8	3.2
	10년 이내	23.2	14.0	13.7
	20년 이내	31.8	24.5	26.9
	30년 이내	15.4	20.1	12.9
	30년 이후 불가능하다	14.9 12.4	17.3 21.3	17.2 26.1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chi^2=26.44$ $p<0.001$	가능한 빨리 통일	11.6	7.7	6.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3.2	65.2	66.8
	현재대로가 좋다	10.9	18.7	17.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3	8.4	9.8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chi^2=73.78$ $p<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4.0	10.7	7.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2.9	36.0	39.1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27.3	42.8	40.4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8	10.5	13.5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chi^2=46.28$ $p<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6	2.3	1.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2.2	19.6	17.4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3.3	54.2	52.8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15.9	23.8	28.5

최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통일에 무관심한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70% 정도가 통일이 필요('매우 필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선호 ‘하’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각각 50.3%, 48.6%로 50% 정도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중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5% 미만이고,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거나 관심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은 합해서 15%를 약간 상회한다. 이에 반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은 25% 내외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25%를 상회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지향 집단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큰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는 24%가 통일이 남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은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강한 민주화 선호 집단은 2/3 정도가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집단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도 통일이 자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²⁹⁾ 이는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체로는 통일과정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²⁹⁾ 물론 상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격차는 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비해 작은 편이다.

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전체의 이득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화를 추진할 때, 민주화 주도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유사한 사고 형태이다. 이 점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도 집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데 이어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8〉).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관계없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수이며, 이어서 경계대상,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 관계를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가 민주화 선호 ‘중’ 집단이나 민주화 선호 ‘약’ 집단 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도 75% 정도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성향이 강한 집단이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조금 낮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이 부분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을 ‘친

복세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중복세력'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표 8〉 북한에 대한 인식(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x^2=12,10$ $p = n.s.$	지원대상	15,2	18,7	18,2
	협력대상	57,1	47,7	47,5
	경쟁대상	2,3	2,3	2,1
	경계대상	18,7	22,2	20,8
	적대대상	6,8	9,1	11,3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 $x^2=16,17$ $p<0,05$	매우 원한다	3,8	1,4	3,4
	다소 원한다	20,7	18,9	15,3
	별로 원하지 않는다	51,8	54,9	48,7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7	24,8	32,5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x^2=15,80$ $p<0,05$	많이 있다	12,4	12,6	18,5
	약간 있다	45,5	54,2	47,5
	별로 없다	35,4	27,1	27,7
	전혀 없다	6,8	6,1	6,3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x^2=14,35$ $p<0,05$	매우 위협을 느낀다	24,6	26,2	29,8
	다소 위협을 느낀다	43,5	51,4	47,2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6,1	18,2	17,7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5,8	4,2	5,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의견 $x^2=12,28$ $p = n.s.$	매우 동의한다	41,9	42,5	46,4
	다소 동의한다	42,7	42,5	34,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9,3	8,9	1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4,7	5,0
	잘모름	1,3	1,4	3,7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x^2=39,99$ $p<0,001$	많이 변하고 있다	8,8	4,4	8,4
	약간 변하고 있다	42,9	41,6	28,8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7,6	39,0	39,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6	15,0	23,5
북한정권(대화와 타협이 가 능한 상대) $x^2=62,27$ $p<0,001$	매우 가능	5,6	2,6	0,5
	어느 정도 가능	48,7	34,1	31,1
	별로 가능하지 않음	36,6	49,5	47,8
	전혀 가능하지 않음	9,1	13,8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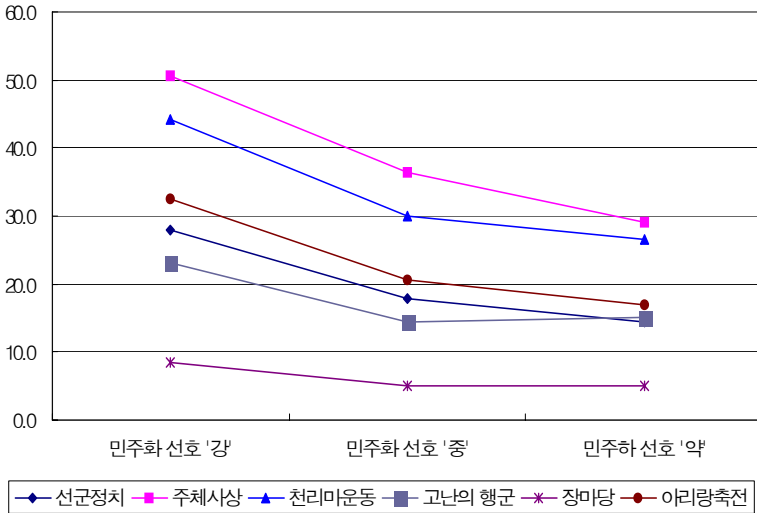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과 상대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현실적인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북한 인식에 대한 이상과 같은 해석에 대해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론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 법률제도, 선거방식, 언어생활, 생활풍습, 가치관 등 각각에 대해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남북한 사회생활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사회 인지도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이 비해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림 3). 민주화 선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를 고려한다면 민주화 선호집단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⁰⁾



[그림 3] 분야 별 '안다(잘 안다+조금 안다)'는 응답 비율(2009년)

IV. 민주화 선호경향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북한 변화를 야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 관용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민

³⁰⁾ 북한 일반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모른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표 8〉 참조).

주화 선호집단이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표 9〉 참조).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많아서 60%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다른 집단은 반대이다. 민주화 선호 ‘중’ 집단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가 넘고,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2/3 정도가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분포는 앞으로도 당분간 대북지원에 대해서 국민 합의 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표 9〉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67.41$ $p<0.001$	매우 도움이 된다	12.6	6.5	4.7
	약간 도움이 된다	47.5	36.7	2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8	41.6	43.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1	15.2	23.0
남북경제협력기 북한 개혁· 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108.88$ $p<0.001$	매우 도움이 된다	23.4	8.2	7.2
	약간 도움이 된다	58.1	57.0	44.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2	27.6	39.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3	7.2	9.0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민 족도(2009년) $\chi^2=65.50$ $p<0.001$	매우 만족	0.8	2.8	4.7
	다소 만족	19.2	31.6	36.4
	다소 불만족	55.6	54.3	47.8
	매우 불만족	24.5	11.2	11.1
대북정책결정시 국민의견반 영 정도 $\chi^2=58.60$ $p<0.00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5	0.7	0.8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14.4	23.1	26.2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3.5	63.3	58.5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0.6	12.9	14.6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대북지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고 있다. 물론 타 집단은 민주화 선호 집단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 선호성향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지향이 약한 집단에서도 50% 이상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모든 집단에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5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비교적 적게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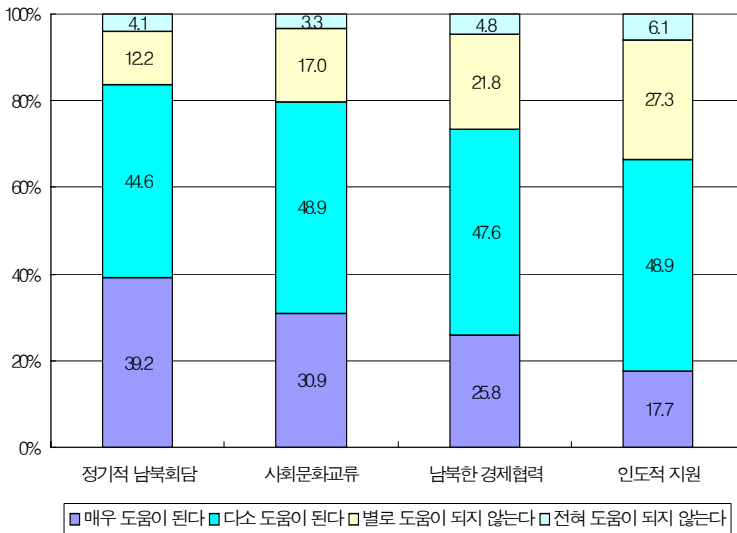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의 불만이 높은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³¹⁾

대북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정부 간 교류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리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정책의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화 선호집단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부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

31)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온다.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술이다. 한편 타 집단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나 국민 의견 반영 정도 역시 민주화 선호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결코 절대수치 면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반에 대해 관심 및 열의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의견에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특히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그림 4]는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 한정해서 여러 대북정책이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4가지 대북정책 중에서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여러 분야 대북 정책 중 정기적 남북회담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 할지라도, 통일과정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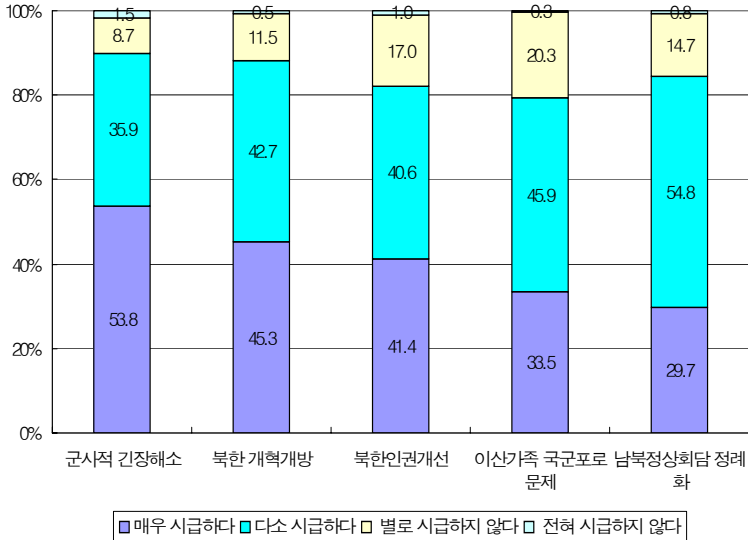
[그림 4] 대북정책별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상대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있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점도 중요하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인도적 대북 정책을 중시하고 있지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 민주화 선호집단과 대북 인도적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간에 정책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의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림 5]와 같다.³²⁾ 민주화 선호집단은 군사적 긴장해소가 남북한 간에 합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이 북한 개혁·개방, 북한 인권개선 순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평가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군사적 남북긴장완화가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것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생각은 '중요한 사항이나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2) 질문 문항에는 그밖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군철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 9.7%가 '매우 시급하다', 20.4%가 '다소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집단에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0%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며, 또한 타 집단과의 차이도 타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그림 5] 대북 사안별 시급한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마지막으로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대북 현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9년 8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현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기에 대북정책 현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크게 한국 요인과 북한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요인을 살펴보자. 한국 요인은 정권교체 요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전 정부가 남북한 사이에 체결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지속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를 원했다.³³⁾ 그리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강화된 것도 남북관계가 경색하게 된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이 역시 남한 측의 정권교체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서 북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든 중요한 북한 측 요인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벗어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8년 12월 북한의 남북직통전화로 단절하였으며, 12월에는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중단, 개성·금강산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 등 소위 '12.1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근로자 억류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표 10〉은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계승에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60% 정도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33)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 계승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체결한 남북합의 내용보다, 남북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표 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 해야한다 $\chi^2=117.04$ $p<0.001$	매우 동의한다	18.4	8.9	7.1
	다소 동의한다	42.9	34.8	33.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7	36.7	31.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	16.1	20.6
	잘 모름	3.8	3.5	7.4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 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chi^2=61.71$ $p<0.001$	매우 찬성	18.4	8.9	7.1
	다소 찬성	42.9	34.8	33.8
	반반/그저 그렇다	24.7	36.7	31.1
	다소 반대	10.1	16.1	20.6
	매우 반대	3.8	3.5	7.4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야한다 $\chi^2=55.77$ $p<0.001$	매우 찬성	21.8	14.7	13.5
	다소 찬성	47.6	46.0	40.6
	반반/그저 그렇다	22.3	35.7	31.1
	다소 반대	6.8	3.5	12.7
	매우 반대	1.5	0.0	2.1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 야 한다 $\chi^2=21.72$ $p<0.01$	매우 찬성	22.2	13.8	16.1
	다소 찬성	32.4	36.0	34.3
	반반/그저 그렇다	31.6	36.4	34.6
	다소 반대	10.7	13.3	11.6
	매우 반대	3.1	0.5	3.4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chi^2=44.58$ $p<0.001$	매우 찬성	13.6	14.0	20.1
	다소 찬성	30.1	32.7	31.9
	반반/그저 그렇다	24.5	33.6	31.7
	다소 반대	24.0	17.8	13.5
	매우 반대	7.8	1.9	2.9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한다 $\chi^2=40.48$ $p<0.001$	매우 찬성	13.9	13.1	15.0
	다소 찬성	40.4	47.1	39.3
	반반/그저 그렇다	25.5	31.6	35.9
	다소 반대	14.4	7.0	6.6
	매우 반대	5.8	1.2	3.2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이 넘는다. 그리고 타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가 넘는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 내의 다수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할지라도 타 집단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개성공단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층이 60% 이상 두텁게 존재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개성공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북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에서 타 집단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찬성의견이 많아,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이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했던 조사결과이다. 또한 타 집단에서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데 50% 이상이 찬성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결과이다.

또한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민주화 선호집단에 속한 사람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인권문제가 중요하지만, 정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책임질 수 없는 민간단체가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 효과도 적고 자칫 대화와 타협상대로서의 북한 정부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편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민주화 선호도가 약한

집단 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상대적으로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아마도 북한과의 교류단절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 제재조치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다. 북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을 민주화 선호집단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관계에 '북한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한과 남한국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북 지원정책이나 남북한경제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보다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V. 맺음말

2009년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 되는 해이자, 독일이 통일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는 통일방안을 새롭게 준비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열기는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들 집단이 통일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체계로 민족주의가 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족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요인분석 해서 '민주주의 선호' 변수를 추출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일반국민들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용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단순히 명목상으로 구분되는 가공의 집단은 아니다. 이들은 집단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실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3집단은 정치성향별 집단과 일부 중복되지만, 동일한 집단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화 선호에 따라 구분된 집단과 정치지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추구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집단이다. 타 집단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에 주요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타 집단 보다 북한 정권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존재한

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소위 통일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남북대치상황에 대해서는 타 집단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다 집단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한 가운데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제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미래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데 대해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정부 보다 북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건 통일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일의식이 높은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인 집단이다.

이 점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일치할 경우이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민주화 선호집단의 가치지향과 크게 상치할 경우 정책을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통일정책이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걸돌고 통일정책 거버넌스 논의는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성국. “민주화운동세력과 계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책』, 25 (1989), pp. 59~72.
- 김국신.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p. 1~83.
- 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2007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 박명규.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제41집 (2008), pp. 245~262.
- 박명규 외 공저.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 . 『2008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박명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6. 1999.
- 박종철.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 합의”.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p. 86~179.
- 송두울.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 임동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확립”. 최장집 외 공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웅진싱크빅, 2007. pp. 283~339.
- 전성훈 외 공저.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 전태국. “변화하는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통일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한독사회학회·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2009년).
- 최형익.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2호 (2006), pp. 51~74.
-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9년 5월 19일).
- 하영선 외 공저.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평화, 민족, 인권 개념 분석”.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2009년 2월 5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A Recommendation to the Unification Policy

Kim, Byeong-jo(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 these days South Korea has faced some difficulties in pursuing the unification policy effectively. The civil society groups divided into left and right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this causes serious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Additionally among the Koreans, the desires and wishes toward unification have diminishing sharply. There seems no main group who devotes eagerly or sincerely to the unification problem.

At this moment, I have recalled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Korea which was once regarded as impossible or unrealistic to achieve. I assumed that the democratization could be finally accomplished owing to the existence of extensive ordinary peoples who hoped and preferred democracy.

If reviewing the recent Korean history, it might be concluded that democratization activated and progressed the unification circumstances. Only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more positive declarations and plans about the unification and even reached 'basic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from the end of 1980' to the early of 1990',

For the analysis, using the national survey datum which were initiated by IPUS(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s Studies), I classified the people along the opinions to the democracy. First, I extracted the democracy inclination variable by factor analysis. Then, I grouped the people into three

according to democratic preference score. I named the three groups, as 'strong democracy inclination group(SDIG)', 'medium democracy inclination group(MDIG)', and 'weak democracy inclination group(WDIG)'.

Next,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nification perceptions, SDIG has more desire and wish to the unification comparing to MDIG and WDIG. SDIG has positive and future-oriented perspective to the unification. SDIG might become main supporter to carrying future unification policy.

Second, to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though the SDIG has different perceptions in some area, SDIG often shows similar perceptions with other groups. This means that, in contrast to left and right demarcation, groups divided by democratic inclination might not initiate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Third, SDIG strongly supports government unification policies which shares democratic values. But government drives a policy which is not in line with democratic values, SDIG not only withdraws support but blames the policy and government. So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pursue democratic unification policy to form the civil society governance in the realm of unification.

Keywords: unification policy, democracy inclination, unification perception, strong democracy inclination group

김병조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2008 통일의식조사』(공저),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cratic Consolidations Aft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선진국에 적합한 민군 관계 발전방향 모색: 정치, 군대, 시민사회 3자 관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